



“경주 지진으로 나라가 온통 들썩인다”



김진영
한국방재협회 회장

경주지진으로 나라가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연 이은 여진으로 시민들은 불안 속 나날을 보냈다. 재난이 닥치면 허술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운운하면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화풀이 대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게 현실이다. 그 만큼 국민들이 믿고 의지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웃에 있는 일본도 지진공포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수준이 달라진지가 오래지 않다. 지진하면 일본이다. 일본인의 잠재의식 속에는 지진에 대한 공포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오기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 당하기만 한 일본이었다.

"땅 밑 단층이 움직이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피해를 줄이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인식을 중앙, 지자체, 온 국민이 공유했다. 물, 전기, 전화가 끊어진다. 건물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애써 구조해도 응급약품과 손길이 부족했고, 손전등을 든 의사가 마취제 없이 수술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언론도 위기관리의 완전한 패배라고 거들었다. 일본인들은 처절하게 복습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했다. "전화지시를 하지도 기다리지도 말라, 자기목숨은 자기가 구한다." 한신 대지진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대응력을 키웠다. 그런 반응이 "지역방재계획"이라는 응집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일명 동일본 대지진)때 조그만 어촌 마을인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엔도 미키"와 지역주민을 봐서도 알 수 있다. 평소의 훈련으로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가 대피방송을 멈추지 않았던 새내기 직원 미키. 본 방송을 믿고 신속히 대피한 지역주민. 그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듯 한 대재앙을 딛고 일어섰다. 대형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가 미흡했다는 자성 아래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등 법 정비를 비롯하여 초동대응체제, 정보전달 시스템, 재해의료 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강화시켰다. 더불어 피해자생활재건지원제도가 창설되었고, 재해 때에는 개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을 연습하고 점검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우리나라 지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문헌 중 지진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책은 ‘삼국사기’라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등 삼국에서 발생한 지진이 107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 지진은 신라시대(기원전 57~서기 992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194건의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1392~1897) 들어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1,967회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고 실려 있다. 1518년 서울에서, 1597년에 함경도·충청도에서, 1643년에 울산에서, 1681년에 강원도에서, 1810년에 함경도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사람과 가축이 깔려 죽었다고 적혀있다. 이때만 해도 지진계 등 지진을 측정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지진만 기록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계기에 의한 측정이 시작 되었다고 본다. 계기측정 이후 규모 5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1936년 7월 쌍계사지진, 1978년 9월 속리산지진, 1978년 10월 홍성지진, 1980년 5월 평북 의주지진, 2003년 3월 백령도 해역지진, 2004년 5월 울진 해역지진, 2014년 4월 충남 서격렬비도 해역지진, 2016년 7월 울산 동구 해역지진, 2016년 9월 경주지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규모 5미만의 지진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했다. 한반도가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부 학자만 주장하고 있는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진은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태풍과 달리 연중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일본과 같은 강진규모의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지진이 심각한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경주지진이 한반도에도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소득이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9월 14일 구마모토 지진과 아소산 화산 분화 이후 누리꾼들은 ‘아소산 분화...한반도에 영향 없어야 할 텐데’, ‘아소산 분화...남의 얘기가 아닌 듯’, ‘아소산 분화...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아소산 분화이후 일부 매체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소산과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900km 내외인데 반해 부산까지가 350km, 서울까지가 650km밖에 되지 않는다. 관심이 쏠리는건 어찌면 당연하다고 본다.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니 긴장을 늦출 수도 없다.

강 건너 아닌 바다건너에 있는 일본을 보고 마냥 불구경만 한 우리가 아닌가. 이번 경주지진 발생 후에도 “지진 조직과 전문가가 없다. 지진계측기가 부족하다”등 늘상 나오는 얘기로 입을 모은다. 언제까지 조직과 인력, 장비, 예산을 단골메뉴로 들먹일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안전처가 탄생되었다. 현 조직과 흩어져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필요시 일본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문을 받아도 된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철저한 대비만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 된다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모르고 당하는 경우와는 달리 알고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큰 재앙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